“영산강 수질 개선 없이 3급수서 물놀이하라는 건가”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Y프로젝트’ 공방

채은지·박필순 시의원, 수량 확보·핵심사업 등 의문 제기

市 “2급수로 상향 노력…물 역사 체험관 등 공공성 감안”

민선 8기 광주시의 주요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 길 Y 프로젝트’의 수질 개선 문제가 7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 지점의 모양(Y)에서 착안한 Y프로젝트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맑은 물·익사이팅·에코·연결 등 4대 핵심전략, 20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7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지난달 Y프로젝트 용역결과 발표회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 영산강’을 목표로 수질 등급 개선과 수변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검토 결과 일부 구간만 수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시는 영산강 전체 수질이 개선되는 것처럼 현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기후환경국에서 수립한 하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광주시의 2030년 목표 수질은 4.6mg/L”라며 “이는 Y 프로젝트 목표인 2등급이 아닌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 결과 영산강 고유 수량 부족으로 수질 개선에 필요한 수량 확보가 어려운 데다 용역보고서에 명확한 해결 방안이 누락됐고 환경부·농어촌공사와도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또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어등산 스카이라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두 사업 모두 선도·중기사업으로 선정됐다”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필순(민주·광산3) 시의원도 “익사이팅 파크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에도 영산강 수질과 유량이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질 개선이 핵심인데 시민에게 3급수에서 물놀이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맑은물, 즉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가 이번 사업의 핵심가치인 만큼 1일 10만t의 유량 확보와 사업 부지 중 광주시 구간에 대한 수질도 2등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21년 환경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 영산강청 승인을 받을 때 3등급으로 목표를 설정한 반면 Y프로젝트는 이후 수립한 용역이다”면서 “시행계획에 제시한 수질개선안 외에 하상여과공법, 생태습지 조성, 우·오수 분류식화, 비점오염 조감, 제1하수처리장 개량, 황룡강 개선 등을 추가 시행해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역사 체험관, 스카이라인은 비용편익 비율(B/C) 외에 공공성까지 감안하면 그레이존(0.8~0.99)에 해당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짚라인과 모노레일 등은 민간투자 활성화 투자펀드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권일 기자 cki@

8일 광주시의회에서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경자청, 미래자동차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집중

‘IKS 2023’ 참가…미래모빌리티홍보관 운영·1대1 투자상담

광주미래차국가산단·소부장특화단지 등 선도도시 기반 홍보

한덕수 국무총리 광주 홍보관 방문 전기차 전환 기대감 드러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미래자동차 관련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7~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광주 미래 모빌리티산업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은 경제자유구역청 중심 외국인 투자홍보 행사로, 해마다 개최됐던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INVEST KOREA WEEK)’를 국내외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가하는 국가정상급 회의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외투자가, 선도기업(앵커기업), 주한외교사절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투자홍보 행사이며, 미래차,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전을 비롯한 타운홀미팅, 투자상담, 신기술 세미나 등 다채로운 투자유치 콘텐츠들로 채워졌다.

광주경자청은 미래모빌리티 홍보전시관 운영, 광주경제자유구역 타운홀 미팅, 해외기업인 1대 1 투자상담, 기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광주 미래 모빌리티 홍보전시관을 방문했으며, 김진철 광주경자청장은 광주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육성 전략을 소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주 노사상생형 일자리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캐스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 르네상스, 전남이 뒷받침할 것”

김영록 지사 ‘목포 도민과의 대화’…적극 지원 의지 피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목포 도민과의 대화’에서 “목포는 김대중 평화주의를 낳은 전라도 정신의 본고장이자, 목포역·목포항·무안국제공항을 품은 전남 서남권의 교통 요충지”라며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도민과의 대화에서 대양산단 내 마른김 공장에 필요한 해수취수시설 신설 요청과 관련, “2024년까지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김 산업 기반 조성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제 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22만 목포시민이 힘을 모아준 데 각별히 감사하다”며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로서 전남도와 목포시 역량과 위상을 국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홍률 시장은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 목포 구도심과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전남형 트램’이 서남권의 획기적 발전의 큰 축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한 도민들의 현장 건의도 이어졌다.

노창균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장은 “시내버스의 잦은 운행 중단과 사업자 경영 포기 등 버스 파행에 대한 시민들 우려와 불편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시내버스 공영화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트램·대불산단대교(삼학대교) 등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 도민들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교육실 보수(4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 예산(4억 원) 반영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8000만원)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노후설비 보수(8억 원) ▲서남권 출산·양육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맘 힐링센터’ 건립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등을 제안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미경유 땐 사업 못해”

시, ‘효천역 제외’ 전남도에 공식 공문…사업 좌초 우려

광주시가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좌초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신속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효천역을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전남도에 광주·나주 주민 편익과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천지구를 경유해야 하며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광주 서구와 남구, 나주를 효율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인구 3만명의 효천지구 경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4가지 안 중 B/C(비용 대비 이익)가 0.78로 가장 높게 나온 다른 노선안이 채택됐다.

해당 노선은 총연장 26.46㎞(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대촌)-나주 남평읍-혁신도시-KTX 나주역)로, 서부농수산물센터와 대촌 사이에 효천지구를 경유하면 2.31㎞가 더 늘어난다.

사업비도 현재 1조 5192억원(국비 7대 지방비 3)보다 광주 부담금 600억원, 전남 부담금 200억원 등 모두 2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노선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과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됐고 그 해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뒤 올 들어서야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만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현재 노선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